

국민의 83퍼센트가 반대한 한미FTA 타결은 무효다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강력한 반대 여론과 저항에도
기어코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협상 타결을 강행했다.

허세욱 동지가 “굴욕 · 졸속 ·
반민주적 협상을 중지하라”며 온
몸을 불사하며 항거했고 수많은
대중이 거리에서 저항했지만 노
무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미FTA 타결로 노무현 정
권 · 한나라당 · 조중동의 ‘삼각
동맹’이 완성됐다. <중앙일보>
는 “용기있는 대통령으로 후세
에 기억될 것”이라고, <조선일보>
도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한 덕
분”이라고 노무현을 찬양했다.
한나라당 전여옥도 “한미FTA의
물꼬를 [튼 노무현을] ... 도와주
고 격려”하자고 했다.

저들은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
으며 한미FTA 타결을 기뻐하고
있다. ‘한미FTA로 세계 최대인

미국 시장을 선점해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
비자들이 값싸고 좋은 제품을 구
입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4대 선결조건’이 보여 주듯
이 협상단은 평범한 사람들의 건
강권, 노동권, 환경, 공공의 이익
을 보호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제거
하려 했다.

무엇보다 한미FTA로 노무
현 정부가 추구한 것은 바로 “외
부 충격을 통한 구조조정”이다.
IMF 때 그랬듯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멋대로 해고하고 비
정규직을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지난 연말 노
무현 정부가 비정규직과 정리해
고를 확대하려고 노동법 개악을
추진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바로
자유롭게 노동자를 해고하고 비
정규직화하려는 협정이며, 자유
롭게 광우병 쇠고기를 팔아먹으
려는 협정이며, 자유롭게 공공서
비스를 파괴하고 공공요금을 인
상하려는 협정이며, 자유롭게 교
육과 의료를 돈벌이로 만들려는
협정이다.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는 평범
한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
고 ‘문지마’ 협상을 추진해 왔다.
이 불평등한 ‘퍼 주기’ 협상을 통
해 노무현 정부가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대신 ‘퍼 준’ 것은 바로
대중의 생존권이다.

따라서 한미FTA 협상 타결은
노무현 정부의 결정적인 범죄 행
위다. 이 용서 못할 범죄 정부에
맞서 더욱 거대하고 강력한 투쟁
을 건설해야 한다.

정부간 체결과 국회 비준을 앞
두고 한미FTA 반대 운동은 더한
층 강화돼야 한다. <조선일보>도
“국회 비준까지는 첩첩산중”이
라며 걱정하고 있다.

부시가 추진했던 미주자유무
역협정(FTAA)도 차베스와 라틴
아메리카 민중의 강력한 저항으
로 무산된 바 있다. 프랑스에서
도 대중적 운동이 신자유주의적
유럽헌법을 부결시켰다.

한미FTA 반대 운동도 많은 성
과를 쌓아 왔다. 노무현 정부가
타결을 계속 미뤄 온 것도 반대
운동과 여론 때문이었다. 김근
태 · 천정배가 단식까지 해 가며
한미FTA 타결을 반대하는 모양
새를 낸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제 한미FTA 타결 무효화와
비준 저지를 위해 더욱 거대하고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특종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
이집트 현지 보도
— 저항의 중심에서 만난
국제 반전 운동
— 이집트 사회주의자
인터뷰
— ‘이란과 한반도의
전쟁 위협에 대처하기’
4, 5, 6면

한미FTA 타결과
반대 운동

3, 8면



우석균 칼럼
— 오직자본을 위한 한미FTA
2면

www.counterfire.or.kr

<맞불> 온라인 기사

알렉스 캘리니코스
— 미국 대출 호황은 끝났는가?
얼마전 주가 폭락의 뿌리에는
미국경제의 불안정과 모순이 있다.
이것이 위기로 발전할 것인지
날카롭게 통찰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선별 ‘합법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선별 ‘합법화’ 방안이
나온 배경과 한계를 살펴 본다

국 민 연 금 개 정 안 에 서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공조’?

제5차 카이로회의 참가자들의
목소리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4월 7일 한미FTA 저지 집회

4월 7일(토) 오후 4시 / 서울 시청 앞

* 집회 후 허세욱 동지 쾌유 기원 촛불 문화제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
서 열린 국제 반전 회의에 <맞불> 기자들이
다수 참가한 관계로 <맞불> 38호를 8면으로
발행합니다.



우석균의 메스를 들어대며

오직 자본의 이익을 위한 한미FTA

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가

한미FTA 협상이 타결됐다. 노무현은 타결 후 발표한 담화에서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고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정부가 관철한 것이 과연 누구의 이익인가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이익은 한국 자본의 이익이다.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48시간 연장 협상에서 이루어진 빅딜은 한미FTA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끝까지 쟁점사항이 되던 자동차와 섬유 문제에서 정부는 몇가지 “빅딜”을 했다.

자동차에서는 배기가스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내주는 대신 미국 자동차 관세의 일부 조기 철폐를 받았고, 섬유 수출관세를 일부 줄이는 대신에 한국의 유전자 조작식품(GMO) 규제를 완전히 철폐했다.

배기량 기준 세제 완화, 대형차 특별소비세 완화는 포드나 GM이나 현대에게는 대형차를 많이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양국 국민들에게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고 환경정책의 포기다. 구호로 정리하면 이렇다. “자동차 기업 이익 위해 독가스 더 마시고 지구온난화 감수하자.”

섬유와 GMO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섬유 수출을 위해 “미국에서 안전하다고 규정한 GMO와 그 교배종에 대해 한국에서는 별도의 위험성 평가를 생략”하잔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GMO 안전평가를 어떻게 하나?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GMO를 동물에게 먹여 보는 실험은 시행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실험은 없다.

미국에서 하는 검사는 GMO가 일반 감자나 옥수수나 화학 성분이 비슷하다는 결과를 기업 측이 제시하면 그것으로 안전성 검사는 끝이다.(이것이 ‘실질적 동등성’에 대한 미국 기준이다)

독성실험? 판매 후 문제가 되면 그 때 예외적으로만 시행한다. GMO 동물실험? 그런 ‘비과학적인 실험’은 아예 없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라는 순진한 질문은 던지지 않기를 바란다. 유럽이 GMO에 대한 실질적인 모라토리움

을 시행하는 것은 정부가 주장하듯 GMO에 대한 근본주의적 거부 운동 때문이 아니다. 최소한의 안전성 평가도 하지 않으며 “사전 예방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이다.

GMO 표시제

몬산토 · 듀퐁 · 신젠타(제약회사 노바티스와 아벤티스의 합작회사) 등 다국적 종자기업의 이익과 국민들의 건강을 맞바꾼 것이 바로 한미FTA다. 당장 농림부가 올해 6월부터 모든 GMO에 대한 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충돌하고 한국이 가입한 카르타헤나(생물다양성) 의정서와도 배치된다. 그야말로 막나가자는 것이다.

기업-정부 제소 제도(투자자 정부 제소 제도, ISD)에도 막판에 제동이 걸렸다. <유에스 트레이드인사이드> 지(紙)를 보면 셰브론 등 미국 석유기업들이 막판에 기업-정부 제소 제도의 범위가 좁아 기업 이익을 침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시아에서는 칼텍스(예컨대 GS칼텍스)라 불리는 셰브론은 공중 보건과 환경 정책은 기업-정부 제소 제도 대상이 아

환경운동연합의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퍼포먼스
— 한미FTA는 자본의 이익과 국민의 건강을 맞바꾸는 것이다

니라는 규정을 기존투자는 빼고 신규 투자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관철시켰다. 심지어 부동산 · 조세정책도 소송대상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기업-정부 제소 제도가 정부 말대로 도입해도 큰 문제가 없는 제도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석유 기업들이 할 일이 없어 막판까지 문제를 삼았을까? 기업-정부 제소 제도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업에 대한 초법적 특혜이고 기업에게 기업 이익에 반하는 공공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

노무현은 담화에서 피해자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지킬 것은 지켰다는 것이 노대통령님의 말씀이다. 도대체 뭘 지켰다는 것인가? “미국산 쇠고기 전수검사 및 뺏조각 검사를 통한 전량 반송”과 같은 ‘비합리적’ 위생검역조치 같은 것은 안 하겠다며 부시의 “체면을 세워 준” 노대통령이 뭘 지켰다는 것일까?

다국적 제약회사에 최소 연 1조 5천억 원 이상의 돈을 퍼주는 대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석유업체에 대한 환경 정책을 포기하고, 모든 공공 정책을 기업-정부 제소 제도의 대상으로 삼아 기업

규제를 포기한 한미FTA가 뭘 지켰다는 것인가?

한미FTA는 금융 세이프가드를 풀어 금융 · 투기자본에 대한 통제권한을 포기하고 자동차 기업과 거대 농축산 기업과 종자 기업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했다. 재벌에 대한 경쟁조항은 목숨을 걸고 지키고 공기업에 대한 상업적 운영 원칙은 수용해 전기 · 가스 · 수도 등의 공공서비스가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원칙을 포기했고 공공요금 폭등의 디딤돌을 놓았다. 그런데도 지킬 것은 지켰다?

물론 지켰다. 현대와 포드, GS와 칼텍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과 삼성생명의 이익을 지켰다. 그렇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다. 간단히 말해 이 정부가 말하는 ‘국익’을 기업의 이익, 자본의 이익으로 바꾸어 놓으면 지킬 것은 모두 지켰다.

다만 포기한 것은 노동자와 평범한 서민의 사회적 기본권일 뿐이다. 노무현의 의약품 협상 처방을 보라. 국민들의 약값 부담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

다만 이제 한국 제약 자본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한다. 신약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연 수천만 명의 죽음을 대가로 2백조 원의 이윤을 걷어 가는 그 죽음의 시장에서 승자가 되는 길. 이것이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길이라고 노대통령은 말한다. 그가 말하는 한국의 앞날은 명백히 제국주의일 뿐이다.

이제 한미FTA 반대 운동은 그 첫 단계를 지났다. 이제 열우당에서조차 일부 대선 주자들이 한미FTA 반대를 선언했다. 한미FTA는 필연적으로 대선과 내년 4월 총선거까지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 운동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한미FTA 반대 운동이 ‘국익’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기업의, 자본의 이윤을 반대하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자본의 이윤을 넘어, 신자유주의를 넘어, 더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 이제 지향점을 더 분명히 하자. 한미FTA 반대 운동, 이제 다시 시작이다.

“

인용해도 될까요?

“한미FTA를 반대하는 세력은 매일 TV에 나오지만, 찬성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돼 있다.”

— 한미FTA 반대 여론이 불만스러운 통합신당모임의 강봉균

“이 법안은 철근시한을 명시하는 동시에 전쟁비용 1천2백40억 달러를 승인하고 있다. ... 민주

당이 의회에 제출한 안은 전쟁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할 뿐 아니라 그 전쟁이 1년 혹은 그 이상 지속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짜 준 셈”

— 하워드 진의 미국 민주당 비판

“특정 대선주자 측이 친북좌파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 열린우리당이나 좌파세력보다 더 김정일을 존중하고 햇볕정책을 지지하며 전시작전통

제권 조기 환수를 인정하는 등 친북정책으로 돌아서겠다고 한다.”

— 이명박을 겨냥한 김용갑

노동부장관 이상수: “민주노총의 탁월한 리더쉽”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 “최근 민주노총의 행보가 저희와 부합되는 느낌을 받고 있다”

— 민주노총 이석행 지도부의 대화 차종을 칭찬하는 목소리

“미국인의 긍정적 관심을 끌려면 미국산 쇠고기

에 대해 당신의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 조지 부시의 협박

“한미FTA[의] ... 물꼬는 노무현 대통령이 텅지 만 그 완성은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을 도우면서 주체가 돼야 한다.”

— 전여욱

“이제 한나라당은 지지할 대상이 아니라 투쟁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 독배에 취한 매춘부”

—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손질에 반발하는 <독립신문> 주필 정창인

한미FTA 반대 운동 — 더욱 크고 강력하게

전지윤

한미FTA 협상 타결은 한미FTA 반대 운동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아직 국회 비준과 체결이 남아 있고, 한미FTA 반대 여론도 여전히 높다. 더구나 운동이 지금까지 거둔 성과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한미FTA 반대 운동은 한국에서 대중적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지난해 초 신년 연설에서 노무현이 한미FTA 추진을 공식화한 후,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농 등 3백여 개 노동·민중·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결성됐다.

대중 운동을 건설하려면 공동의 요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세력이 연합해서 함께 투쟁하는 공동전선이 필요하다. 범국본은 바로 그런 구실을 했다.

범국본은 한미FTA의 본질과 폐해를 알리고 폭로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지역과 학교와 작업장에서 수많은 강연회, 토론회 등이 열렸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사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했다.

다양한 활동가와 지식인들이 이 과정에서 큰 기여를 했다.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 이해영 교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이강택 KBS PD 등이 그들이다.

이들이 제공한 신랄한 비판과 주장, 생생한 영상물 등은 광범한 대중에게 한미FTA에 대한 반감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NAFTA 이후 멕시코의 참상과 광우병 쇠고기의 공포를 보고 들으며 각성했다.

이런 정치적 각성은 활발한 캠페인 건설로 이어졌다. 범국본의 한미FTA 반대 서명에 순식간에 1백만 명이 동참했다. 열정적으로 거리, 지하철, 학교, 작업장 등 곳곳을 누비며 서명을 받아낸 활동가들이 이룬 성과였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이 과정에서 중추적 구실을 했다.

문지마

마침내 7월 12일 서울 시청에서 한미FTA 반대를 외치며 농민과 노동자 등 5만 명이 결집해 저력을 보여 줬다. 그 당시 한미FTA 반대 여론은 과반을 넘어섰다.

이런 운동과 여론의 압력 때문에 지난해 6월부터 매달 연달아 협상을 열며 연말 타결을 목표로 치달리던 저들의 일정은 형클어졌다. 물론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한 점도 작용했다.

그러나 정태인이 지적하듯 우리 운동의 저항이 “없었다면 한미FTA는 원래 청와대의 계획대로 작년 연말에 타결됐을 것[이며] … 농림부가 ‘손톱만한 뿔조각’을 이유로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반송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무지막지하게 반대 운

동 탄압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적 기본권을 억눌렀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틀어막고 대중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다. 집회·시위·언론·표현의 자유마저 가로막았다. 범국본의 모든 집회는 금지됐고 범국본의 한미FTA 반대 광고는 방송이 불허됐다.

강력한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문지마’ 협상을 강행하는 노무현 정부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경악했다. 그토록 반대했지만 결국 이대로 협상이 타결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무기력감도 생겼다.

지난해 7월 5만 명을 결집시킨 한미FTA 반대 운동

그러나 끈질기게 건설해 온 운동의 성과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의 강경 탄압이 올해 3월 10일 집회에서 〈조선일보〉기자까지 폭행하는 무리수로 번지며 상황은 저들에게 불리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3·17 국제공동반전행동의 성공도 한미FTA 반대 운동을 고무했다. 반전 운동과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긍정적 상호작용을 한 것이다.

반대 운동과 여론의 고조는 김근태와 천정배가 뒤통게 한미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까지 하게 만들었다. 운동

김근태와 천정배의 한미FTA ‘반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미FTA 반대 운동이 낳은 성과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주류 정치권의 균열이다. 특히, 얼마 전까지 여당 의장과 정부 장관으로서 한미FTA 추진을 뒷받침해 온 김근태와 천정배의 변신은 놀라울 정도다.

김근태는 지난해에 “한미FTA와 한중FTA를 동시에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내자”던 적극적인 FTA 지지자였다. 지난해 5월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에서도 “성장론자, FTA 찬성론자”를 자처했다. 이른바 ‘뉴딜’을 떠들면서 경제5단체와 “한미FTA의 성공적 타결에 공동 노력한다”는 공동 합의문까지 발표했다.

천정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그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한미FTA는 우리 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

라며 “반대 시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겠다”고 했다.

김근태와 천정배 모두 2005년 한·칠레FTA 국회 통과 때 찬성표를 던졌음은 물론이다.

반대 운동과 여론이 이들로 하여금 “한미FTA를 하려면 나를 밟고 넘어가라”고 말하며 단식 농성까지 하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운동은 이렇게 변신한 정치인들을 대중 운동 강화의 도구로 이용해야 한다. 주류 정치권의 균열은 우리의 기회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믿지 못할 자들인 것도 명백하다. 이들은 FTA뿐 아니라 한미FTA도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김근태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의 저력과 건재함은 3월 25일 2만 명이 모여서 활력있고 자신감에 찬 집회와 행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 시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반대 운동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고, 이것이 협상 시한이 막판에 몇 차례나 혼란스럽게 연장된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충격을 주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안 된다”는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적 “소신과 양심에 의한 결단”에 따라 마침내 타결됐다. 이제 한미FTA 반대 운동은 정부간 체결과 국회비준을 앞두고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운동은 더욱 기층 대중 속으로 파고들며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농민과 일부 조직 노동자, 조직 좌파들을 넘어서 운동의 기반을 청년들과 미조직 노동자들로 확대해야 한다. 기층 곳곳에서 신자유주의 반대 공동전선들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가의 용어’보다는 ‘계급의 용어’로 한미FTA가 공공서비스 시장화, 환경 파괴, 약값 인상, 광우병 쇠고기 수입, 비정규직 확대 등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FTA를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한국 경제와 국가의 이익을 얼마나 관철했는가로 타결 내용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손익 계산을 따져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는 노무현의 논리에 무기력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협상에서 얻어낸 ‘이익’이 과연 어느 계급의 이익인지를 날카롭게 폭로할 필요가 있다.

운동 속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대안과 대안적 세계화에 대한 토론과 주장도 더 활발해져야 한다. 이것은 운동의 정치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한미FTA 저지 운동에서 힘을 합쳐 온 다양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선을 앞두고 폭넓은 단결과 후보 단일화 등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은 한미FTA 반대 운동의 대중적 확산과 진보진영의 성장 둘 다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협상이 줄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천정배도 FTA가 “선진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방정책”이라며 다만 “줄속 추진에 대한 반대”라고 말했다.

더구나 이들은 한미FTA 찬성파들을 포함한 통합신당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근태는 “정치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한미FTA 반대 운동은 이들의 태도 변화를 운동에 유리하도록 활용하되, 이들에 대한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이들의 태도를 ‘신자유주의 반대’라고 확대 해석해서, 이런 자들을 진보진영 선거연합의 대상에 포함하는 일도 결코 없어야 한다.

제5차 카이로회의

저항의 중심에
국제 반전 운동이 결집하다

[편집자]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국제 반전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중동에서 제국주의와 독재에 맞서 저항이 고조되고 있고, 그러한 저항이 국제 반전 운동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보여 준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올해 이 회의에는 76명의 '다함께' 참가단과 4명의 민주노동당 참가단이 참가했다. 다음은 '다함께' 참가단이 회의가 마무리된 직후 현지에서 보낸 글이다. 지면 관계상 국제 참가단과 현지 활동가들의 목소리와 회의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다양한 사진들은 <맞붙> 웹사이트에 올린다. 그 밖의 더 자세한 소식과 보고는 다음 호(39호)에 실릴 예정이다.

200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는 제국주의 전쟁 반대 운동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의 결합을 도모하는 공간이다.

올해는 제3차 이집트 사회포럼과 함께 5개의 컨퍼런스와 40개 가까운 포럼이 뿔뿔한 일정에 따라 진행됐다.

컨퍼런스는 '팔레스타인·이라크·레바논의 저항세력을 지지하기', '이란과 한반도의 전쟁 위협에 대처하기', '식민주의와 세계화에 맞서 좌파와 이슬람주의 운동 사이에 가교를 놓기' 등 국제 반전 운동 내의 굵직한 주제들을 놓고 참가자 전체가 모여 토론하고 논의하는 회의다.

반면에, 포럼은 '노동자 포럼: 경제 개혁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 '농민 포럼: 토지 개혁 반대 시위 - 강제 퇴거에 맞서는 농민들', '학생 사회주의자들: 사유화와 교육' 등 더 특정한 구체적 쟁점들을 둘러싸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소규모 워크숍이다.

이번 회의에는 주최국 이집트는 물론 영국·그리스·스페인·노르웨이·덴마크·오스트리아·캐나다·베네수엘라·레바논·팔레스타인·이라크·수단·한국 등 17개국에서 3천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집트를 제외하면, 80여 명이 참가한 한국 참가단이 가장 규모가 컸고, 캐나다·영국 등도 많이 참가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4월 13일 운동[차베스를 지지하는 단체]에서 한 명이 참가했으나, 개막식을 비롯해 주요 회의에서 인상적인 주장과 발언을 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지난해 1월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하마스가 승리한 뒤 열린 카이로회의에서는 하마

스가 크게 부각된 반면, 지난해 여름 레바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가을 미국 중간선거에서 부시 정부가 패배한 뒤 열린 회의에서인지 올해는 헤즈볼라가 큰 인기를 끌고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한편, 회의가 열린 이집트에서는 올해 초 노동자 파업 물결(30년 만에 최대 규모)에 이어 농민들의 토지 점거 투쟁이 벌어졌는데, 최근 무바라크 독재 정부가 헌법을 개악하면서 자행한 혹독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저항 운동은 자신감과 투지를 다지며 일선 불사의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카이로회의였기에, 나날 내내 급진적이고 전투적이며 열정적인 분위기와 활력이 흘러넘쳤다. 그리고 정부



“이집트에서 민주주의란 인간인을 군사 재판에 세우는 것이다”

의 가혹한 탄압을 받고 있는 이슬람주의 단체 '무슬림 형제단'의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두드러졌다. 특히, 민간인임에도 군사 재판에 회부된 무슬림 형제단 지도부 40여 명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명 활동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29일 저녁 3시간 넘게 지속된 개막식부터 뜨거운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무슬림 형제단 의장, 키파야 운동 중앙위원,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지도자들, 영국 리스펙트 사무총장 존 리즈, 이라크에서 사망한 영국군 병사의 어머니 로즈 젤틀, 알렉스 켈리니코스 등이 연단에 올라 제국주의 전쟁과 점령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의 '다함께' 참가자들을 대표해 최일봉 운영위원도 연단에 올라 박수를 많이 받았다.

헤즈볼라

30일 오전에 열린 '팔레스타인, 이라크, 레바논의 저항세력을 지지하기' 컨퍼런스에서는 이 세 곳의 저항세력을 지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아랍의 독재 정권이 반대하고 그 정권이 미군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그리고 제국주의 세력이 부추기는 종파간 이간질에 말려들지 말고 분열을 극복하고자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 레바논에서 친이스라엘 정부 관료를 축출해야 한다는 것, 제국주의 본국에서 대중적 반전 운동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파견령국의 저항세력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주장들이 지지를 많이 받았다.

31일 오전의 '이란과 한반도의 전쟁 위협에 대처하기' 컨퍼런스에서는 이란 출신 영국 대학 교수, 한국의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레바논 출신 베네수엘라 활동가가 연단에 올라 핵과 관련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중잣대를 비난하고 이란 공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고, 청중들은 뜨겁게 호응했다(평화적 핵 에너지 사용권을 둘러싼 이견은 있었지만). [이 컨퍼런스에서 김하영 운영위원이 발표한 연설문은 6면의 기사를 보시오.]

'식민주의와 세계화에 맞서 좌파와 이슬람주의 운동 사이에 다리 놓기' 컨퍼런스에서는 헤즈볼라 연사의 발언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일부 좌파들이 이슬람주의 저항세력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 협력을 거부한 것처럼 이슬람주의 운동 내 보수적 세력들이 좌파들과의 협력을 거부한 것이 광범한 반제국주의 세력의 단결을 가로막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는 오랫동안 좌파와 협력해 왔고 지난 여름 이스라엘의 침공을 격퇴함으로써 그 단결의 가능성과 효과를 모두 보여 줬다.

존 리즈는 1989년 동유럽 정권들이 붕괴한 뒤 제국주의 질서가 재편되면서 좌파와 이슬람 조직들이 단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지적했다. '좌파'라는 말은 이제 어느 한 쪽의 국가들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저항세력을 지지하는 것을 뜻하게 됐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전쟁·무슬림 혐오로 이어지는 새로운 패권 정책의 결과로 이슬람 조직들의 대중 운동이 부활했다는 것이다. "이제 좌파가 여기에 연대할 기회가 열렸다. 그러나 카이로회의에 무슬림 형제단이 참가하게 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과정은 결코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플로어에서 무슬림 형제단의 한 발언자는 "우리가 차이를 먼저 말하기 전에 공통점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이슬람 성직자의 말을 인용하며 좌파와 이슬람주의자들이 제국주의에 맞서 단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4월 1일 마지막 컨퍼런스 '아랍 민족의 민주화 투쟁을 지원하기'에서는 이집트 키파야 운동 지도자가 무바라크 일가를 축출하지 않고는 아랍의 민주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집트의 해방은 단지 키파야 운동같은 정치적 민주화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며, 마할라 노동자 투쟁 같은 경제적 민주화 운동과 결합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청중 토론에서는 아랍 친미 정부들의 행태를 성토하며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싸움과 이들 보수적 친미 아랍 정권들에 맞선 투쟁이 결합돼 있음을 지적하는 주장이 많

았다. 또, 아랍 사회운동과 세계 운동의 국제적 연대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폐막식에서는 각각의 컨퍼런스에서 나온 주장과 제안들이 취합돼 선언문 형태로 정리됐고 다양한 요구와 행동 계획을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시운주의, 제국주의 전쟁,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년 3월 27일 30일에 열리는 제6차 카이로회의에 초대한다고 선언했다.

제5차 카이로회의에 대거 참가한 76명의 '다함께' 참가단과 4명의 민주노동당 참가단은 아랍인들을 포함해 많은 국제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많은 이집트인들은 '다함께'와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2005년과 2006년에 주한 이집트 대사관 앞에서 주최한 이집트 민주화 운동 방어 시위의 사진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부탁했다.

개막식에서 연설한 이집트 혁명적 사회주의자 나기브는 대규모 한국인 참가단의 의의를 이렇게 정리했다. "현재 투쟁의 구도를 '이슬람 대 서구', 또는 '문명의 충돌'로 말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대규모 한국 참가단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을 것이고,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단결

이번 카이로회의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먼저 무바라크 정부가 민주화 운동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집트의 다양한 운동 세력들이 한 곳에 모여서 운동의 다양한 쟁점들을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제공했고 국제 참가자들은 이집트 민주화 운동에 지지를 보냈다.

또 다른 의의는 국제 반전 운동, 저항세력, 아랍, 특히 이집트의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한 곳에 모여 단결을 모색하는 장소였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제5차 카이로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일 것이다. 이런 연결 끈을 놓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국제 반전 운동 앞에 놓인 새로운 도전이다.

이집트 사회주의자 인터뷰

“이집트에서 급진화하는 운동이 주변 중동 국가들로 확산될 것입니다”

제5차 카이로회의에는 청년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이집트 급진 좌파 단체인 '혁명적 사회주의자'의 나기브를 만나 최근 이집트에서 성장하고 있는 운동에 대해 들었다.

최근 무바라크 정부의 개헌 초안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개헌의 배경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헌법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무슬림 형제단 때문입니다. 무슬림 형제단은 이집트에서 가장 큰 야당 세력이고, 지난 총선에서 20퍼센트를 득표했습니다. 이번 개악은 무슬림 형제단이 계속 그런 정치적 [대안] 구실을 할 수 없도록 봉쇄하려는 것입니다.

또 무바라크는 권력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줄 셈인 듯합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반발을 낳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에는 이집트를 더 완전한 경찰 국가로 만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바라크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강화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공 부문의 주도성, 노동자 권리,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의 '사회주의적'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들은 외국 자본 유지에 목말라하는데, 더 많은 공공부문을 사유화하여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야당과 사회 단체들이 모두 개헌 국민투표 보이콧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니다. 헌법 개악에 반대하는 강력한 저항이 벌어질 것입니다. 헌법을 바꾸기는 쉬웠겠지만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몇 배나 어

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총이조각 위에 문장을 바꿔 썼을 뿐입니다.

최근 이집트에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이 파업들의 성과와 이집트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지난 4개월 동안 역사적인 노동자 파업 투쟁 물결이 있었습니다. 최근 한 공장에서는 9천 명의 노동자들이 이틀 동안 파업을 벌여 승리했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은 30년 만의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파업 물결은 마할라에서 벌어진 2만 7천 명의 방직 노동자 파업으로 시작했는데, 이 파업은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투쟁이 승리하자 파업 물결이 전체 방직 산업으로 들불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철도 노동자, 시멘트 노동자들이 용기를 얻어 파업을 벌였습니다. 매우 새로운 공장과 산업에서 파업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매우 높는데,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이 요구 조건을 대부분 쟁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무바라크 정부가 이 파업 노동자들을 탄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재 정권 시절에 한국 노동자들은 투쟁할 때마다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집트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노동자들을 쉽게 탄압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투적 파업이 벌어지면 2~3명이 사살되고 수백 명이 체포됐습니다. 당시에는

실사 요구 사항을 쟁취하려 해도 희생도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변했습니다. 무바라크 정부가 너무 허약해서 지금의 투쟁이 진정한 독립 노조 건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할라에서는 이미 5천 명의 노동자들이 어용 노조 탈퇴 청원서에 서명했습니다. 아직 독립 노조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파업 때처럼 비슷한 사례가 들불처럼 번질 것입니다. 1980년대 말 남한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변수가 있지만 현재 이집트 노동 운동의 분위기가 당시 남한 노동 운동의 분위기와 비슷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말한 노동자 투쟁과 개헌 반대 운동 같은 민주화 운동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벌어진 민주화 요구 시위들이 몇 차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무바라크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장면이 텔레비전과 신문에 보도됐고, 이것은 싸울 수 있다는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은 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세력의 대부분은 그 두 운동을 더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카라마당[나세르주의 정당]조차 두 운동을 별개로 생각합니다.

아직 소수지만 우리[이집트 '혁명적 사회주의자']는 두 운동을 연결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는 [2000년에 시작된] 2차 인터파다 이후 운동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팔레스

타인 정점을 통해 광범한 운동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민주화 쟁점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공동전선 전술을 적용해 급진화한 청년들을 운동에 끌어들이려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슬림 형제단과 함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슬림 형제단은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화 운동 세력인데다 국가의 혹독한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배제하고서는 제대로 된 민주화 투쟁을 건설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장했고 영향력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성장하고 급진화하는 운동이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집트 정부는 미국의 중동 전략에서 핵심적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에즈 운하를 미군에게 개방하고 이집트 내 군 기지를 활용하게 하는 식으로 미국을 간접 지원합니다.

또, 이집트는 아랍에서 가장 큰 국가이기 때문에 이웃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집트 노동자들은 거의 모든 아랍 국가에서 일하고 있고 이집트에서 정치적 발전은 주변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큼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아랍 민족주의, 이슬람주의 운동 모두 이집트에서 시작돼 주변국으로 확산됐습니다. 따라서 이집트에 영향력 있는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면 다른 중동 국가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핵을 빌미로 한 전쟁 위협에 대처하기

[편집자] 이 글은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이 카이로회의의 주요 컨퍼런스 중 하나였던 '이란과 한반도의 전쟁 위협에 대처하기'에서 연설한 내용이다

저항하는 아랍 민중에게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시는 대량살상무기를 가진 강대국들이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지난해 10월에 핵 실험을 했습니다. 어제 이곳 회의장에서 만난 한 분이 북한 핵무기가 위협적이지 않느냐고 물으시더군요.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핵무기도 지지해선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 핵무기는 부시가 북한을 위협해 온 결과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 당국은 2005년 초에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는데, 그 때 그들은 이라크 전쟁의 교훈에 따라 핵무기를 만들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라크 전쟁의 교훈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미국의 침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고, 북한을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해 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과물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과물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부시가 만든 과물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부시의 위협에 제대로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핵무기를 많이 가진 국가일수록 북한 핵실험에 대해 더 신경질적이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신경질적이었죠. 하지만 미국은 누구에게 핵을 폐기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북한은 5천8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미국은 1만 기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핵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미국은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투하했습니다. 그 5년 뒤 한국전쟁에서 미국은 또다시 핵무기 사용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그 뒤 미국은 북한과의 정전 협정을 위반한 채 남한에 핵무기를 들여왔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핵공격 위협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를 문제 삼지만 이것은 위선적인 이중잣대일 뿐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해 국제적 제재를 받기 몇 달 전에 미국은 인도의 핵을 인정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를 미국의 동맹으로 끌어들이려 하



‘이란과 한반도의 전쟁 위협에 대처하기’에서 이란 출신 영국 대학 교수, 레바논 출신 베네수엘라 활동가 등과 함께 연설한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연단 오른쪽에서 두 번째)

는 것입니다.

또, 미국은 자신의 경비견인 이스라엘의 핵무기 수백 기에 대해서는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모순

지금 미국은 북한과 핵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부시 외교노선의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고, 이를 통해 외교적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북미 협상은 오히려 미국의 모순들을 선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일관성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부시는 북한과는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왜 이란에 대해서는 공격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해 지난해 10월에 실험까지 했고, 반면 이란은 IAEA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말했듯이 5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는 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이란 공격 위협이 완전히 부당함을 보여 줍니다. 점점 높아지는 이란 공격 위협이 사실은 핵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시는 이라크 수렁에 빠진 책임을 이란으로 돌리고 중동에 대한 지배력을 확립하기 위해 이란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부시가 북한과 핵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미국이 이라크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시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일을 “피그미”라고 부르며 경멸해 왔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부시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북한과 마주 앉게 됐을까요?

이라크 수렁에 빠진 미국이 중동에서 멀리 떨어진 동북아시아로 전선을 확대할 여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북미 협상은 중동에서 패배하고 있는 부시의 처지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한반도 전쟁 위협이 잠시 약화된 것은 이라크 저항 세력과 중동을 비롯한 세계 반전 운동이 부시를 깊은 수렁에 빠뜨린 덕분입니다. 남북한 민중은 여러분들에게 빛을 지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한반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남한은 미국의 충직한 동맹으로 유명하지만, 남한 국민의 90퍼센트는 부시의 전쟁에 반대하고 이라크에 한국군 2천3백여 명을 파병한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미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저는 미국과의 협상이 아니라 우리들의 투쟁에 우리의 평화,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

습니다.

첫째, 미국이 경계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최빈국인 북한이 아니라 지역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입니다. 따라서 설사 북미관계가 개선된다 해도 동아시아의 긴장은 해소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한국, 인도 등과 동맹을 강화하고 동아시아의 미군을 재편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아시아의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군사적·지정학적 경쟁 격화는 경제적 경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함으로써만 진정한 평화를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한반도 평화는 현재로선 중동 정세에 달려 있습니다. 중동에 대한 지배력을 확립하려는 미국의 전쟁이 성공을 거둔다면, 피 맛을 본 야수는 다시금 한반도를 노릴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반전 운동은 중동을 포함한 전 세계 반전 운동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라크 점령과 이란 전쟁 위협을 종식시키고 이 야수를 중동 전선에서 패퇴시키는 것입니다.

이라크 파병 한국군을 철군시키고 미국 제국주의를 물리치지 않고서는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어느 곳도 결코 평화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 제국주의를 물리치기 위한 투쟁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맛불> 증면을 위한 5천만 원 모금에 동참합시다

* 02) 2271-2395으로 메시지나 전화를 주십시오.

* 통장으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17002-04-078931 기업은행 066-042771-01-012 농협 100037-56-119794 신한은행 308-12-498840 우리은행 1002-130-549338 우체국 011726-02-129945 하나은행 197-910005-87207

* 홈페이지 www.counterfire.or.kr에서 핸드폰 결제로 모금에 참여하거나 CMS 계좌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MS 모금은 매월 25일에 인출됩니다.)





대중의 삶과 생존권을 ‘퍼 준’ 노무현

한미FTA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자 보수 언론들은 “역사적 개방”이라며 한미FTA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치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노무현은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섬유·자동차 관세가 낮아져 수출이 늘어난다는 점을 가장 크게 홍보해 왔다.

물론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퍼센트를 없앴고 섬유 제품 중 일부의 관세를 인하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매년 15억 달러가 걸려 있다며 핵심 의제라고 선전하던 반덤핑 등 무역구제에서는 미국의 강경한 협상 자세로 거의 소득이 없었다.

그러나 이런 관세 인하를 얻어내려고 한국의 자동차 관세 8퍼센트를 즉각 없애기로 했다. 쇠고기 등의 주요 농산물의 관세 인하를 약속했을 뿐 아니라 쇠고기와 유전자조작 식품의 검역 완화도 약속했다. 수출을 조금 늘리려고 식품 안전을 포기한 것이다.

더구나 관세 인하와 수출 증대가 현대·기아차 기업주들에게는 “경제적 실익”이었지만 노동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 지난 몇 년간 현대·기아차는 수출 호황을 누려왔지만 비정규직 확대와 집단 해고가 거듭돼 왔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규정도 협정문에 넣어 생색은 냈지만,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나 협의할 수 있다는 ‘부실 어음’이다.

보수 언론 등의 한미FTA 찬성론자들은 관세 인하나 치열해진 경쟁으로 서비스 산업이 효율화하면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런 효과로 1인당 약 30만 원의 소득 증대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노무현도 “사람들은 근거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양극화’라는 말만 주장하니 참으로 답답”하다고 뻔뻔하게 얘기한다.

경제 선진화

그러나 노무현이 추진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다.

사실 “사회·경제 시스템 선진화”야말로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사활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다.

한국 지배자들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낀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통해 “선진 경제”로 가는 길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에게 한미FTA는 “경제활동을 억누르고 있는 고질적인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을 날려버리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선진 경제’나 서비스 산업 효율화로 평범한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완전한 사기다. 경제 시스템 선진화는 기업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모든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없애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선진화’로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 기업도 이익을 얻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구조조

정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

의약품 분야에선 신약의 최저가격보장제를 제외하곤 다국적 제약회사의 요구가 거의 관철됐는데, 이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의 약값 부담이 크게 늘고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 건강보험이 약해지면 민간 보험사들이 해택을 볼 것이다.

한미FTA는 공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민영화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공기업들에게 ‘상업적 이익’을 고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전부터 공기업들의 ‘상업적 공사화’를 추진해 왔고, 우리는 그 구조조정의 결과를 경험한 바 있다.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뀌면서 원가보상률을 54.5퍼센트에서 단계적으로 1백 퍼센트로 상향조정한다며 수익이 나지 않는 역을 대거 폐쇄하고 값싼 열차 운행을 줄였다. 요금을 대폭 인상하고 동시에 어린이·청소년·장애인·경로 합인을 대폭 축소했다. 또, 3만 명 가량 되는 정규직 중 1만 명을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그 공백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려 한다.

IMF 이후 금융권 구조조정에서 노동자들이 대거 해고되고 은행의 이윤은 대폭 증가했지만, 그 이윤의 상당 부분은 은행 수수료 인상으로 생긴 이익이었다.

수익성 추구를 최대 목표로 삼는 이런 ‘선진화’ 정책은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박탈로 나타난 것이다.

언론은 산업별 이해 득실을 비교·분석하기 바쁘지만 한미FTA로 촉발될 효율화와 구조조정 압력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공공요금 폭등, 대규모 해고와 비정규직화, 서비스 질 저하를 겪게 될 것이다.

반민중적 협상

게다가 한미FTA 협상에서 거론되지 않은 교육·의료 분야 등도 한미FTA를 빌미

로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자발적’ 구조조정 압력이 거세질 것이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나 ‘비위반 제소’ 등은 신자유주의의 반민중적 내용을 거스르는 모든 시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석균 보건 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미FTA는] 한미 양국의 기업에게는 최대한의 이윤을 한국(및 미국) 국민에게는 사회적 권리를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불평등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세균 교수도 “해외시장 개척, 미국 자본과의 결합, 국내시장 개방 등으로 노동 유연화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 정부 관료나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한국의 국익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은 “FTA는 한 쪽이 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고 했지만, 저들의 ‘국익’은 평범한 대중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예컨대 NAFTA 이후 캐나다에서 임시직 비율이 3배나 증가하고, 미국 제조업의 평균 임금이 13퍼센트나 감소한 반면 미국 기업 경영자들의 연봉은 4백60퍼센트나 증가했다.

한국에서도 IMF 위기 이후 10년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 비금융법인(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가처분 소득이 6백9퍼센트나 늘어난 반면, 개인 가처분 소득은 겨우 65퍼센트 증가에 그쳤다.

따라서 한미FTA 반대 운동은 한미FTA의 반민중적 성격을 좀더 부각할 필요가 있다. ‘국익’ 논리에 강조점을 두고 산업별 이해 득실로 협상 평가가 옮겨가면 대중이 입는 피해라는 한미FTA의 핵심이 묻힐 위험이 있다.

한미FTA가 무엇보다도 반민중적이라는 점이 강조될 때 한미FTA에 일관되게 맞서 싸울 수 있고 대중적 운동 건설도 가능할 것이다.

강동훈



한미FTA 협상 중단을 외치며 분신한 하세욱 동지 — 노무현은 그의 절규를 짓밟고 협상을 타결했다